

국조특위 가동... 선관위 개혁·원포인트 개헌 쟁점 부상

내일 첫회의 열고 중앙선관위 보고 발생경위, 물량 산정 과정 등 점검 정치권 선관위 개혁 논의도 본격화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회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본격 가동된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해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여야는 주요 증인·참고인과 자료 제출 등의 안건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기관증인으로는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중심으로 부르고, 노태약 전 중앙선관위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지난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3지방선거 홍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등은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조특위는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이뤄지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통해 투표용지 부

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 파헤칠 예정이다.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에 따른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도 규명할 계획이다. 선거 관리 인력 운용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선관위 조직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혁안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 축소 지침이나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선관위 기강 해이와 방안 운영 문제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선거관리 개혁방안은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비상임직의 상임직 전환과 현재 1명뿐인 상임위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다.

여권에서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방안 등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하는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여야 간 일치가 되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특검을 도입해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

다. 필요하면 정부에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께서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에 이어 김 총리도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이번 선관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 특히 청년이나 대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다른 기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하게 됐다는 것을 반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한다”면서 “차체에, 얘기가 나온 김에 끝을 봐야 하고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와 야와 국민이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끝을 보자’라는 마음을 정해 놓고 이 건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민주당 전대 시동... 정청래 출마 결단 임박

연임 도전 최대 변수 ‘지선 책임론’ 권리당원 비중 높은 호남 표심 주목 출마시 김민석·송영길 3파전 구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내로 차기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출마를 결심하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의를 표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원내에 복귀한 송영길 의원 간 3파전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4일 최고위원회·26일 당무위원회를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구성한다. 전준위원장은 4인 의원 중에서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선거

관리위원회(선관위)도 곧 발족한다.

전준위와 선관위가 설치되면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된다. 전당대회는 권역별 순회 경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은 이번 7월 16~17일에 받을 방침이다.

정 대표 연임 도전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지방선거 책임론’이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16곳 광역단체장 선거구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탈환을 목표로 한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 대표의 선거 지휘가 부족했고 연임에 도전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비당권파 사이에서 나왔다.

관건은 호남 표심이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 내에서 권리당원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정 대표는 지난

해 8월 박찬대 당시 당대표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권리당원으로부터 약 66%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호남 지역의 비토 정세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 대표는 지난 19일 6·3지방선거 당선인 등을 격려하기 위해 전북을 찾으며 호남 민심을 살폈다. 다만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도 호남 표심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광주·전남 특히 전라북도에서 호남의 민심이 소명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보고 싶다”며 “제가 광주에서 지금 세 후보 중에 1등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 그걸 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청와대는 21일 참모진 인사 관련 발표를 했다. 왼쪽부터 신임 홍보소통수석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민정수석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사회수석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 국가안보실 1차장 강건작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 위원, 국가안보실 3차장 송기호 청와대 경제안보 비서관.

/뉴시스

李, 청와대 홍보·민정·사회수석 전면 교체

국정 2년차... 수석 인사 단행 성기홍 홍보수석·한찬식 민정수석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홍보소통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회수석에는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겸 우석대 교양대 객원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수석급인 국가안보실 1차장과 3차장도 교체됐다. 집권 2년차에 맞춰 사실상 ‘중폭’에 가까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 것이라 평가다.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5명의 청와대 수석급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있게 구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인사 기초를 설명했다.

성기홍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연합뉴스 정치부장과 논설위원, 연합뉴스TV 보도국장,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21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법무부 인권국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동부지검장, 수원지방법원 부장 등을 역임하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서예진 기자

보유세 강화 예고에 여야 공방 격화

>> 1면 ‘서울 아파트값’서 계속

보유세를 강화해야 ‘기대 수익’에 대한 심리가 열어진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세제 개편을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선택한 이유로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현금 흐름을 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3월에 자신의 SNS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미국은 주마다 보유세가 다르며 뉴욕의 경우 1%,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에는 최고 0.6%라는 내용

이다. 모두 한국의 실효세율(약 0.15%)보다 높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에 7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시장가액비율 상향은 물론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타깃은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투기 수요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청와대와 정부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증세 본색’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최보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은 안 짓고, 매물은 막아놓고, 가격이 오르면 불로소득이라 낙인 찍고, 마지막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꺼낸다”고 평가했다.

/서예진 기자

신임 해수부 차관에 남재현 본부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에 남재현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사진)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 단행 소식을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남재현 신임 차관은 해수부 항만국장과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항만 전문가로 업무 추진력을 두루 갖추고,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난 정통 관료”라고 소개했다. 이어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